



세계 노사정 소식

미국

미국 : 세금인하 법안에 포함된 실업수당제도 개선 법안

실업수당의 확대와 일시적인 임금소득세의 인하 등 실업보험제도의 현대화를 위한 여러 법안들이 이번 140억 달러(한화 약 16조 원) 예산안에 포함되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법안들이 작지만 매우 중요한 개선이며 장기적으로 실업 구제대책을 제시하고 경기침체 시 실업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장인 Alan B. Krueger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과는 판이한 시대인 1930 년대에 만들어진 실업보험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실업보험제도가 만들어진 시기에 대부분의 실업자들은 제조업의 한시적인 실업자였다. 그러나 오늘날 실업자는 제조업에서 완전히 다른 산업으로 옮겨갔다” 고 말했다.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인가만 남은 이번 새 법안에는 주정부의 실업자 재취업 지원사업에 실업보험금을 지원하는 안이 포함된다. 실업자를 고용하고 재훈련시키는 사용자에게 임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조지아 워크(Georgia Works)와 같은 사업이 실업보험금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장기 실업보험 수혜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여부를 주정부가 조사하도록 하는 실업보험급여 자격 재심사도 새로운 법안에 포함되었다. 또한 이번 재심사는 개인 맞춤형 경력 상담과 재취업 서비스를 장기 실업자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도 개선 방안에 포함된다.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축소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해 해고자를 줄이자는 방책으로, 근로자 다섯 명의 근로시간을 20%씩 단축함으로써 한 명의 해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번 법안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실행하는 기업에 대해 줄어든 근로시간과 임금을 실업보험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의 통과에는 양당의 첨예한 논쟁이 있었으나 결국 민주, 공화 양당 모두의 지지를 얻었다. 법안의 주요 협상자였던 데이브 캠프(Dave Camp) 연방 상원의원(공화당, 미시간주)은 이번 개혁을 “역사적인” 것으로 법안에 명시했으며, 실업자들에게 재취업을 위한 훈련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보수적 경제학자들과 연구소들은 실업보험



제도의 현대화 방안을 지지해 왔으며 실업자들이 새 일자리를 찾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법안에 포함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 출처: 뉴욕타임즈, 2012년 2월 21일자, 'Tax-Cut Bill Includes Updates to Jobless Benefits System'

미국 : 경제지표 개선

노동시장 상황이 완만하고 지속적인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에는 22만 7천여 개의 일자리가 생겨났다.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24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3개월 연속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2년여 기간 동안 최고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실업률은 여전히 8.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급과 같은 더딘 회복 추세로는 경기침체 이전 5% 수준의 실업률을 달성하기까지는 5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회복 기간인 9년여 동안 미국인들은 일자리 불안과 임금상승 기회의 박탈, 삶의 질 하락 등을 겪게 될 것이다.

노동시장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지원 감소를 추진하려고 한다.

다수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연방고속도로 법안(Federal Highway Bill)은 현재 하원의회에 계류 중이다. 공공부문에서 지난 2년여 동안 48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고 지난 2월에도 6천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원의회의 공화당은 주정부의 지원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일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예산 삭감을 요구하려 한다. 예산 삭감은 사업체와 소비자신뢰지수에 손상을 가져오고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3월 2일 대통령은 1조 달러(한화 약 1,148조 원) 예산의 지역 제조업 허브 네트워크 기획안을 발표했다. 이 기획안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또 대통령은 관리당국이 제조업의 설비와 연구 투자 지원에 국가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과 연방정부의 자원 4천5백만 달러(한화 약 517억 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초기단계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이후 단계에서는 승인을 필요로 할 것이다.

노동시장이 악화되고 회복되는 가운데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의 경제정책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3~29세 대졸 남성의 실질 시간당 임금은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5.2% 감소했고 같은 기간 여성의 경우 4.4% 감소했다. 실업의 증가와 임금의 하락은 고졸졸업자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19~25세 고졸 남성의 경우 실질 시간당 임금은 8% 감소했으며 고졸 여성의 경우 3.1% 감소했다.

최근 고무적인 일자리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

• 출처: 뉴욕타임즈, 2012년 3월 9일자, 'Better Numbers'

유럽

독일 : 독일 단체교섭, 2011년 경향과 2012년 주요 일정

2011년에 체결된 독일의 단체협약들은 그 이전 연도의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독일 친노동성향의 ‘한스 뢰클러 재단(HBS)’ <WSI 단체협약 아카이브>의 분석에서 드러났다.

여러 부문들에서 올해 단체협약을 통한 임금인상은 평균 약 3~4%에 달했다. 예컨대, 화학산업부문의 경우 4.1%의 협약을 통한 임금인상과 신규협약 유효기간 15개월안이 합의되었다. 2010년에 ‘일시 보너스지급(Pauschalzahlungen)’이 큰 의미를 지녔다면, 2011년에는 그 이후 여러 부문들에서 지속적으로 임금인상이 합의된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한편 작년 독일의 소비자물가는 약 2.3%가량 올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2배가량 인상된 것이다. 이에 대해 WSI의 단체협약 전문가인 라인하르트 비스핑크 박사는 “연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단체협약상의 임금인상은 많은 부문들에서 물가의 인상을 상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방통계청은 2011년 세전임금(Bruttolohn)의 수준은 평균적으로 단체협약상 소득증가액보다 더 높게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 배경으로는 2011년 경기호조로 근로시간이 증가했고, 여러 기업들에서는 그에 대해 단체협약 이외의 보너스 지급을 늘린 것을 들 수 있다. 비스핑크 박사는 2011

년도 교섭들에서는 단순히 통상의 임금교섭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일부 개별 단체협상 부문에서는 단체협약의 기준들을 놓고 격렬하고 근원적인 논쟁이 벌어졌다. 다른 부문들에서는 합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질적인 교섭 규정의 재구축까지 낳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석이 기초하는 구체적인 정황은 다음 사례들에 담겨 있다

- 인쇄업부문의 경우 서비스부문 노동조합인 베르디(Ver.di)가 다수의 파업을 동반한 3개월간의 협상 끝에 3년간 지속되는 기타노동조건협약(Manteltarifvertrag)을 변함없이 재차 유효하도록 이끌었다.
- 베르디는, 일간신문사 편집국 직원들의 경우 광범위한 단체협약을 통하여 임금삭감에 대한 사측의 요구를 대규모의 파업을 통하여 저지하고, 역시 기타노동조건협약을 3년간 유효하도록 사용자들로부터 확약을 받았다.
- 철강산업부문에서 금속노조(IG Metall)는 직업 훈련협약의 체결 이후 훈련을 받은 젊은이들을 무기고용으로 받아들인다는 확약을 담고 있는 단체협약을 업종 최초로 이루었다.
- 동독지역 화학산업부문의 화학산업 노조(IG BCE)는 생애 단계들에 부합하는 근로시간구축



방안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연령에 부합하는 노동, 단체협약 내에 가족과의 시간을 보장해 주는 방안, 선별된 근로자집단을 위한 업무시간 단축, 그리고 장기근로시간구조의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끝으로 우정부문의 독일체신회사(Deutsche Post AG)는 베르디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연령에 부합하는 노동과 약 13만 명의 직원들을 위한 보호조치를 담은 협약을 체결하였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2015년 말까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해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올해 2012년의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상반기에 여러 굵직한 교섭 일정들이 잡혀 있다. 공공서비스부문(연방정부와 지방정부)과 은행업부문의 경우 2012년 2월에 기존 협약의 유효기간이 끝난다. 3월에는 금속-전기산업의 교섭이 예정되어 있고, 5월 말에는 자동차부문 대기업 폭스바겐VW사의 교

섭 일정이 잡혀 있다. 마찬가지로 5월 말과 6월 말에는 화학산업에서의 교섭이 시작될 것이다.

계속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종래 업종별 최저임금이 도입된 10개 부문들에 이어 2012년에는 그 적용 부문들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10개 부문은 오물청소산업, 건설업, 광산 특수직, 지붕개량업, 전기수공업, 건물청소, 벽칠업, 요양부문, 건물경비부문, 세척서비스업 등이다. 이에 더하여 현재 직업훈련부문, 임업서비스부문 그리고 기계설비부문 등에서 이미 최저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인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파견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화가 될 것이다.

- 출처: WSI 홈페이지, 2011년 12월 14일자 보도자료, 'WSI zieht Tarifbilanz 2011: Höhere Tarifabschlüsse - Konflikte um Tarifstandards'

독일 : 독일노총, 유럽경제위기 해법 제시

지난해 말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은 최근 악화된 유럽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발표한 바 있다(2011년 12월 14일). 그 기조는 현행 유럽은행의 정책이 실제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맞추어 있지 않고, 각 국가들에게 임금 및 사회복지 조치의 감축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적 내용이었다. 노총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잘못 처방된 긴축정책으로 세계경제의 위축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대중적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산더미 같은 부채가 더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DGB는 전면적인 방향 전환을 주창했다. 독일 정부에 유럽중앙은행(EZB)이 신용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핵심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EZB를 향하여 네 가지 방안을 촉구했는데, 안정성 및 구제를 강화하

는 조치를 취할 것, 분배정의에 부합하는 재정정책에 주안점을 둘 것, 금융시장을 현실적으로 규제할 것, 자산을 통해 재원조달이 이루어지는 미래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 등이었다.

DGB는 은행의 인증을 받은 구제기금(EFSF)의 구비를 촉구하며, 다른 민간은행들과 마찬가지로 EZB도 이를 위한 재원조달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제기금은 자신의 신용역량을 대폭 확대하고 비상시 무제한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정부대출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 불안정한 투자자들이 정부로부터 대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EFSF의 구제금융이 신용손실보험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취하였다.

DGB는 경기변동 및 분배정의에 부합하는 재정정책을 주창하며, 기민하고 구속력 있는 국가 재정정책의 조율을 촉구하였다. 노조는 EU 회원국들이 특히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금증대를 통해서, 경기국면상 및 분배상 공적 예산의 정의로운 공고화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호하고 안정적인 경기국면 단계에서 국가들은 그들의 공적지출을 채무를 통해서가 아니라 세수증대를 통해 재정을 마련해야 하며, 나아가 다른 EU 국가들과의 경쟁관계에서의 지위를 세금, 임금 및 사회적 및 환경의 덤핑수단을 통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한편, 위기탈출 후 다시 성장하기 위하여, 또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하여, DGB

는 유럽을 위해 포괄적인 미래 프로그램을 주창했다. DGB의 관계자는 “지금은 유럽국가들, 즉 무엇보다도 위기에 빠진 국가들이 집단적으로 위축하는 대신에 성장 전망을 제공받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구상된 광범위한 미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이것은 유럽의 미래 차관을 넘어서 재원이 마련될 것이고, 미래의 투자를 포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DGB에 따르면,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미래의 역량을 지니는 산업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해야 하며, 교육과 생태적인 현대화를 촉진하고 유럽 주변부 지역에서 발전의 후퇴를 제거해야 하는데, 그것은 새롭고 의미 충만하며 혁신적인 수백만 개의 일자리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특히 독일과 같은 대규모 채권국들에는 대중적인 고임금을 통해 국내수요 창출과 공적투자 및 고용강화가 증대되어야 한다.

또한 DGB는 금융시장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금융기관들에 유효해야 하는, 보다 까다로운 자기자본규정을 통해서 유럽은행의 만성저자본화를 극복하는 방안과 함께, 국민경제 전반에 해가 되는 사업과 상품들을 규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 출처: DGB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1년 12월 14일자, ‘Vier-Punkte-Programm für einen Kurswechsel in Europa’



독일 : 독일 정부, 파견근로자들을 위한 보편적 최저임금 개념 확정

최근 독일 정부는 파견근로자들을 위한 보편적 최저임금 개념을 최초로 확정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이를 도입했다. 이는 종래에 노동시장 유연화의 부작용을 제어하기 위하여 현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 가운데 또 하나의 획기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90만 명에 달하는 파견근로부문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수준은 서독지역의 경우 시간당 7.89유로(한화 약 11,860원), 동독지역의 경우 시간당 7.01유로(한화 약 10,540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결정을 위한 논의는 2011년 연말부터 본격화되었고, 이러한 결정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노사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이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또 건물청소와 지붕수리부문에 대한 최저임금도 일단 연장했다. 내부청소부문에서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13년 1월까지 서독지역은 9유로(한화 약 13,530원), 동독지역은 7.56유로(한화 약 11,370원)가 될 것이다. 유리 및 외부청소에서의 임금한도는 소폭 인상이 이루어져 2013년부터 서독지역은 9유로가 될 것이며 동독지역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지붕수리부문의 최저임금은 2013년까지 11.20유로(한화 약 16,840원)로 인상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방안들을 발표하면서 우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노동부 장관(CDU 소속)은 특히 파견근로자들을 위한 구속력 있는 임금하한선이 설정된 것에 대해 기쁨을 표했다.

그녀는 이를 통해 “외국과의 저임금경쟁”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파견근로자들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노동사회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가능한 한 빨리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연방노동사회부는 “만일 업종별 합의가 2012년 1/4분기 내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소위 하르츠 타협으로부터 나온 확인을 해소하고, 동일임금을 위한 시점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밝혀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어떻게 이러한 위원회를 결성할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한 문제이나, 적어도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대표자들이 이에 참여할 것이라고 노동사회부 대변인은 밝혔다.

야당들은 파견근로부문에서도 동일임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요구안에 힘을 주었다. SPD 원내부대표인 후버투스 하일(Hubertus Heil)은 이렇게 정해진 최저임금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본원칙을 정규직과 파견근로자들을 위해서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SPD의 노동시장정책을 맡고 있는 아네테 크라메(Anette Kramme)는 그에 대해 “시급 8.5유로(한화 약 12,780원)가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언급하였다. 좌파당 당수인 클라우스 에른스트(Klaus Ernst)는 많은 파견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근로에 머물게 될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동일임금과 함께 그는 시급 10유로(한화 약 15,030원)의 법정 최저임금 도입을 촉구

했다. 독일노총(DGB)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고수했다. 노총 대표부 위원인 크랄우스 마테키(Claus Matecki)는 “이제 파견근로자들은 노동시장에서 특별히 유연하게 움직여야 하고 적은 계획안전성을 지녀야만 한다”고 말하며 그것이 지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민당의 원내 근로자 그룹의 대표인 페터 바이스(Peter Weiß)는 그러한 결정을 연방정부가 진지하게 “공정한 임금의 지불”을 추구하는 것을 증명

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보편적 적용성을 지니는 부문별 최저임금은 자신들의 근로자들에게 생존을 보장하는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들에 부담을 주어 경쟁력의 왜곡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2011년 12월 20일자, ‘Kabinett beschließt Lohnuntergrenzen’ Auch für Zeitarbeit gilt künftig verbindlicher Mindestlohn’

독일 : 노동시장 호조, 올해 실업률 300만 명 미만 유지 예상

독일 노동시장이 호조를 띠고 있다. 2009년 위기 이후 발생한 일자리 상실분은 만회되었고, 건설업종에서만 올 겨울에 실업이 증가하는 경향을 띠었을 뿐이다. 독일 연방노동국(BA)은 올해 1월 노동통계를 발표하면서, 올 겨울 실업이 다소 증가세로 나타났지만 이것이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현재의 상황은 오로지 계절적 이유로 발생한 것일 뿐이며, 현재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노동시장의 긍정적인 기운은 가까운 시간 내에 전환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BA에 따르면, 네트워크 제공업체인 노키아 지멘스 네트워크(Nokia Siemens Networks)에서 독일 내 2,900개 일자리 삭감 예정안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거의 유일한 대량해고의 사례라는 것이다. 174개 자체 지역 조직에서 수행한 매월 설문조사를 통해 BA는 대규모 해고가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고 결

론내렸다. 다만, 오직 6개 기관들만이 해당 지역의 노동시장 상황 악화를 보고하였을 뿐이다. 비록 지난 수개월 동안처럼 강력하지는 않겠으나 결론적으로 노동시장의 호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상태의 호전으로 2009년 위기 동안 진행된 일자리 삭감분들은 만회되었다. 경제학자들도 “익숙하지 않게 튼튼한” 노동시장이라고 평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일단 얼핏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인다. 예컨대, 1월 실업자 수는 308만여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12월에 비해 약 30만 명가량 더 증가한 수치였다. 12월부터 1월까지 실업률도 0.7%포인트가량 올라 7.3%로 증가했다. 1년 전 같은 시기의 실업률은 7.9%에 달했었다.

BA의 해석은 이러한 실업자 수의 증가는 전적으로 계절적 요인에만 근거한다는 것이다. 즉 매년 1월에는 실업이 눈에 띄게 증가해 왔다. 많은 건설업



근로자들이 겨울에 해고가 되었다가 연초에 다시 재고용된다. 소매업에서도 근로자들은 크리스마스 특수를 위해 기간제로 채용되었다가 시즌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일자리를 잃곤 한다.

BA에 따르면, 오히려 지난 3년 동안의 추세와 비교했을 때 올해 1월 실업률의 증가세는 뚜렷하게 약화되었다. 지난 3년간의 실업자 수는 평균 35만 4천 명가량 증가했는데, 올해는 그 수가 30만 2천 명에 그쳤다.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실업이 실제로는 약간 감소한 것이다. 온화했던 겨울을 감안했을 때 약 2만 4천 명가량이 더 줄어들었다는 쪽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1월의 실업은 지난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다.

실업자 수로는 집계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예컨대 1유로의 일자리를 취하거나 실업부조금(하르츠 4장: Hartz IV)을 받는 고령자들로 지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아무런 일자리 제안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또 실업에 대해 총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려면 저임금 고용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저임금 고용은 1월에 410만 명에 달하였고 이는 지난 해에 비해 49만 명가량 줄어든 규모라는 사실이 감안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기변동이 하강한다 해도, BA는 계속해서 2012년에 실업자 수가 3백만 명을 밑돌 것으

로 전망한다. 그 비율은 유럽 내에서 가장 양호한 모습이다. 지난 1월 룩셈부르크에서 유럽통계청인 Eurostat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유럽권에서 실업은 지난 연말 내내 높게 유지되었다. 12월의 실업률은 전달과 비슷한 10.4%에 달하였다. 11월의 수치는 10.3%로 집계되었다. 지난해 12월 그 비율은 10%에 달했다. Eurostat는 유럽권 전체 실업자 수를 현재 약 1,647만 명으로 계산한다. 이는 11월에 비해 2만 명이 증가한 규모이고 2010년 12월에 비해서는 75만 1천 명이 증가한 규모이다.

스페인과 그리스는 유로권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이와 계속해서 씨름해야 한다. Eurostat가 독일에 대해 계절에 기초한 실업률을 6.6%로 증명한 반면, 스페인과 그리스의 실업률은 각각 22.9%와 19.2% 수준이다. 이는 상이한 집계방식 때문에 어느 정도 BA가 조사한 것에서 일정하게 벗어나 있다.

계속해서 가장 높은 청년실업의 상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페인에서 있어 왔다. 현재 스페인의 25세 미만 청년들의 거의 절반은 실업상태에 있다. 전체 유럽권에서의 청년실업률은 21.3%에 달하는 반면, 독일은 7.8%를 기록해 유럽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 출처: FR-Online, 2012년 2월 1일자, 'Arbeitsmarkt: Jobverluste seit der Krise 2009 aufgeholt'

스웨덴 : 공공직업알선소 네덜란드 이민자 노동시장전 참가

스웨덴 공공직업알선소는 사용자가 필요한 인력을 스웨덴 외부에서 찾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2월 11~12일 네덜란드 위트레흐트(Utrecht)에서 열린 범유럽 노동시장전에 참가하였다. 범유럽 노동시장전은 유럽 내부 노동인력 자유 이동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현재 스웨덴의 노동시장이 하강 국면에 접어든 상황인 데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사용자들은 필요한 인력을 스웨덴에서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스웨덴의 공공직업알선소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 노동시장 인력 고용전문가들이 이번 범유럽 노동시장전에 참가하여 협력 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이번 범유럽 노동시장전에는 각 유럽국가의 노동시장 인력채용 전문가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데, 특히 5개 노동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5개 분야는 정보통신업, 보건, 산업기술, 교통 및 광산업이다. 각 분야별 데스크에서 노동시장 인력채용 전문가들은 개별 사용자가 위임한 업무에 따라 인력채용에 들어갈 것이다. 노동시장전 개인 참가자들은 노동시장 주변 여건, 생활 수준, 기업환경, 만일 참가자가 맞는 직업을 발견해 이민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이주 방법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것이다.

스웨덴의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노동 인력을 국외에서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스웨덴에는 여러 가지 직업군에서 경력자 부족으로 사용자들이 업무에 적합한 노동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위트레흐트의 노동시장전에는 직업을 찾아 다른 국가로 이주하려는 사람들도 참가할 것이지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참가할 것이라고 스웨덴 공공직업알선소 측은 밝히고 있다. 이 노동시장전에 참가하는 스웨덴의 기업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다수의 스웨덴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대기업 및 대규모 지방자치단체도 적합한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참가하고 있다.

위트레흐트 노동시장전은 유럽에서 다른 국가로 노동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 및 기업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노동시장전이다. 2011년에는 약 12,000명이 입장료를 내고 참가하였는데, 금년에는 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출처: Arbetsförmedlingen(공공직업알선소), 2012년 2월 10일자, Pressmedelande 'Arbetsförmedlingen matchar internationell kompetens på immigrantmässa i Holland'



스웨덴 : 공공직업알선소 스웨덴 망명자에 대한 정착지원프로그램 제공

스웨덴의 공공직업알선소는 2010년 12월 1일을 기해 새롭게 이주한 망명자들과 그 가족이 스웨덴에 정착하는 데 있어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2011년 12월 1일 이런 정착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한 지 일 년째를 맞이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망명자들의 정착지원 기간이 예전보다 약간 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정착지원 기간 동안 망명자들과 그 가족들은 스웨덴어를 공부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현장실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사안은 망명자들이 공공직업알선소를 방문하는 시점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앞당겨졌다는 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망명자들과 그 가족들이 경제적 자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예전에 비해 단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공공직업알선소는 축은 기대하고 있다.

2011년 12월 현재 공공직업알선소는 약 7,954명의 망명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직업 알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망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수도인 스톡홀름과 그 교외 그리고 스웨덴 서부 및 남부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 공공직업알선소의 통계에 의하면, 이민자 정착프로그램 참여자들 중 약 4분의 3은 40세 이하이며 그 나머지는 25세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망명자 정착프로그램에 따라 공공직업알선소 담당자와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함께 참가자 각 개인에 맞는 정착활동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망명자들과 그 가족들이 최단기간에 경

제적 자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공공직업알선소의 담당자들은 망명자들이 거주 허가를 받는 순간 바로 접촉을 개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망명자들과 그 가족들이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어떤 직업과 교육이 필요한지를 바로 결정할 수 있다. 이민자 정착프로그램 참가자의 열 명 중 아홉 명이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 또는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준비 과정에 참가하였다.

공공직업알선소는 망명자들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맡게 됨으로써 전국적인 노동시장을 점검해, 망명자들이 어떤 직업 능력이 있는지 또 각 지방의 노동시장 수요 및 기타 노동시장 여건이 어떤지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공공직업알선소의 정착프로그램 시행 1년 보고서에 따르면 일정 지역에 있어 주거시설이 불충분할 경우 망명자들이 그 지역에 정착하는 데 심각한 장애요소가 된다고 한다.

망명자들의 노동시장 참여 준비 과정에 있어서는 스웨덴 적응에 꼭 필요한 언어와 사회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망명자 개별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 회사 및 지원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들은 현실적이고 노동시장에 관련한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어 공공직업알선소가 담당하는 업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망명자 정착프로그램 전체 참여자의 약 72%가 개인 지원자 및 지원회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 2012년 1월 기준 스웨덴의 193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 약 190개의 지원회사에 소속한 지원

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스웨덴 공공직업알선소, 2012년 2월 23일자, Pressmedelände 'Tidiga insatser ger

nyanlända personer snabbare kontakt med arbetsmarknaden'

영국 : 정부 구직 프로그램 정착

정부의 구직 프로그램이 궤도에 올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직자 중 약 20%가 최소 6개월 이내에 취업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수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용자들이 제공한 것으로, 영국 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예상 목표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현재 상당한 악조건하에서 장기실업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고용단체연합(Employment Related Service Association: ERSA)의 컬스티 맥휴는 2011년 6월에 발표된 지표들이 지금도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계속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6월에 이 프로그램이 처음 실시되었을 때, 정부는 프로그램 참가자의 40% 정도가 취업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이 통계 수치는 지역적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BBC가 입수한 다른 수치에 의하면, 스코틀랜드 중부와 잉글랜드 남서부에서는 프로그램의 참가자 중 10% 미만의 사람들만이 취업할 수 있었다. 리버풀에서는 10%, 반슬리에서는 12%만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반슬리 의회의 스티브 휴톤은 지역 경제침체로 인

해 일자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소용이 없다고 호소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계약자(고용자)들은 한 명의 실업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할 때마다 400파운드(한화 약 72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만약 그 실업자가 실직한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훨씬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다. 가디언의 조사에 따르면, 헐(Hull)에 사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한 결과, 이들 중의 상당수는 임시직 또는 무급으로 취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구직자들 중에는 알코올이나 약물중독자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꺼리는 경우도 있다. 포츠머스 대학의 맨 핀 교수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급진적으로 준비되어 실시되었고 이로 인해 고용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말했다.

- 출처: 1. BBC ONLINE, 2012년 2월 4일자, 'Work programme on track, Chris Grayling says'.
2. Guardian, 2012년 1월 31일자, 'Rising unemployment puts Cameron's work programme in the spotlight'



영국 : 지방정부 근로자 160만 명, 3년 연속 임금동결

약 160만 명에 달하는 지방정부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해 또 다시 동결된다. 이들의 임금은 2010년 보수-자민 연립정부가 긴축정책을 시행한 이래 3년째 동결되는 것이다. 지방정부 사용자들은 2월 23일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전례 없는 3년 연속 임금동결은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전역에 걸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용 부담 증가와 지방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이 줄어든 데에서 기인한다. 이에 노조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GMB, Unison 등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들은 공공부문에서도 저임금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3년 연속 동결된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실질임금에서의 엄청난 삭감을 의미한다며, 사용자들이 임금에 관한 이슈를 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노동쟁의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3년 연속 임금동결’ 방침에 대해 지방정부협의회는 “아주 어려운 결정 중 하나였다”면서도 “지방정부 납세자와 근로자 전체를 위해 옳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방정부 비용 증가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 감축이 결합돼, 지방정부에게 남은 결정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임금까지 인상하면 더 많은 일자리 감소와 서비스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지방정부 협의회 관계자는 “3년째 임금동결로 근로자들이 느낄 불만과 좌절감을 인지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재정을 둘러싼 전반적 상황이 암울한 가운데 우리는

2013년에 ‘4년 연속’ 임금동결을 피하고자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과 협의를 시작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반발은 거세다. GMB 노조는 “지방정부의 고위직 임금은 한없이 오르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더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해 시도하는 가운데 돌봄노동자, 급식담당자, 사회복지사, 학교 지원업무 인력을 포함하여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지방정부 근로자들은 15%가 넘는 실질임금 삭감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2010년 예산안에서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저임금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긴축재정 상황에서도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보수당이 잡고 있는 지방정부에서조차 정부 방침을 비웃는 임금동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GMB 노조는 사용자들이 중재에 부치는 것을 거부하면 노동쟁의에 관한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Unison 역시 “임금을 3년 연속 동결하면서 근로자들을 빈곤의 뿔에 가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각 지방정부는 지방세를 올리거나 예비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출처: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 2012년 2월 23일자, ‘Pay freeze for 1.6 million council staff’

영국 : 버거킹,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체험프로그램 시행 중단

패스트푸드 체인인 버거킹이 정부의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체험프로그램(working experience scheme)을 도입하였다가 중단한 마지막 기업이 되었다. 버거킹은 6주 전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청년 실업자들을 슬라우에 있는 버거킹 본사에 투입하였으나, 여기에 참가하는 실업자들이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장시간 일한다는 시민단체의 비난에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체험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 계획을 비판하는 이들은 이 프로그램이 실업자들을 무급으로 사용하는 “노동력 착취”라고 주장한다. 버거킹은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더 이상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의 근로체험프로그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업은 드물다. 테스코(Tesco)는 이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불해왔고 정부 관계자에게 비용 보조를 줄이지 말아달라고 요구해 왔다. 한편 또 다른 슈퍼마켓 체인인 세인즈버리(Sainsbury's)도 몇몇 점포에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해 왔으나 회사 정책과 다르다는 이유로 최근에 중단하였다. 패션 체인인 마탈란(Matalan)과 서점인 워터스톤(Waterstones), 전자제품 소매 회사인 마플린(Maplin)도 이미 이 계획을 중단하였다.

정부의 프로그램 도입 취지는 근로 경험을 쌓고 향후의 취업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정부

측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 장관인 크리스 그레일링은 참가자 중 절반이 구직에 성공하였다며 이 프로그램을 옹호하고 있다. 그는 실업자들이 단순히 구직수당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보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 몇몇 자료들에서 입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보수당 의원인 조지 유스티스도 정부 계획을 지지하며, 이 프로그램을 중단하려는 회사들이 시민단체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구직의 첫 번째 단계는 희망하는 직업과 관련한 근로 경험을 갖고 팀원이 되어 일을 하는 것이라며, 단지 몇 주에 불과하지만 일자리 체험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구직수당(Jobseeker's allowance: JSA)을 계속 받고 여행 경비나 육아 보육 비용도 보조받게 된다. 그러나 1주 이상 근무 후에 중도 하차하는 참가자의 경우는 2주 동안 비용 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참가자는 16~24세의 실업자로서 2~8주간 무급으로 주당 25~30시간 일하게 된다.

- 출처: BBC, 2012년 2월 25일자, 'Burger King leaves work experience scheme for jobless'



영국 : 연속 5개월째 실업률 8% 이상 기록

영국 통계청(ONS)이 내놓은 최신 노동시장 통계(2011년 10~12월)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실업자는 267만 명으로 전 분기에 비해 4만 8천 명이 늘었다. 실업률은 8.4%로 199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5개월째 연속 8% 이상을, 34개월째 7% 이상을 기록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고용인구는 2,912만 명으로 전 분기보다 6만 명이 늘었다. 고용률은 70.3%로 전 분기보다 0.1%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2010년 같은 기간과 견줘보면 0.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미국 통계청의 비교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세계적 불경기가 시작된 2008년 1월 이래 실업의 증가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 불완전고용(underemployment)

고용인구는 늘었지만 풀타임 고용은 전분기와 견줘 1만 명 줄었다. 대신 파트타임 고용이 6만 5천 명 늘었다. 영국노총(TUC)은 불경기가 시작된 이래 불완전고용 증가에 큰 우려를 표명해 왔다. 실업자 수 증가뿐만 아니라 일하기를 원하는 비경제활동인구와 풀타임 일자리를 원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수도 매우 많다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2008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실업자 수는 100만 명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비자발적인 파트타임 근로자는 60만 명 이상, 일자리를 원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7만 명 이상 증가했다. 따라서 불완전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의 수는 628만여 명으로 집계된다. 또한, 비자발적으로 임시직 일자리에 있는 근로

자들 역시 2008년 1월 36만 2천 명에서 2011년 11월 60만 2천 명으로 무려 24만 명이나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완전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거의 7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여성

전 분기에 비해 증가한 실업자 수의 3분의 2는 여성이다. 여성 실업률 7.7%는 1994년 이래 최고치이다. 여성 실업자 수는 18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파트타임 일자리 중 여성은 577만 4천 명, 남성은 195만 2천 명이다. 비자발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한다는 남성은 30.3%인 데 비해 여성은 13.1%였다. 하지만 비자발적인 여성 파트타임 근로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풀타임 일자리를 가질 수 없어서 파트타임으로 일한다는 여성이 75만 4천 명이었는데, 이는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1992년 이래 최고치이다. 지난해 4분기의 경우, 비자발적인 여성 파트타임 근로자는 4만 5천 명 증가했는데, 남성은 같은 기간 3만 8천 명 증가에 그쳤다.

◆ 청년

4분기 청년 실업자 수는 103만 8천 명으로, 전 분기에 비해 2만 2천 명이 증가했다. 연속 4개월째 청년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것이다. 1년 넘게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의 수는 24만 6천 명인데, 이는 전 분기(25만 9천 명)보다 줄어든 것이다. 2010년 초부터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의 수가 20만 명을 웃돌고 있는데, 이 역시 1995년 이래 최

고치이다.

교육, 사회사업 부문에서 나왔다.

◆ 일자리 및 정리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의 잠정적인 통계치에 따르면, 구인 일자리는 전 분기에 비해 1만 1천 개 늘어난 총 47만 6천 개이다. 그러나 구인 일자리 규모는 지난 12개월과 비교할 때 2만 1천 개가 적은 수준이다. 4분기의 구인 일자리 1개당 실업자 비율은 5.8대 1인데, 이는 일자리 1개를 놓고 실업자 5.8명이 경쟁한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정리해고 된 사람들은 16만 4천 명으로 전 분기에 비해 1만 7천 명 늘었다. 정리해고자의 18.6%는 공공행정기관, 의료,

◆ 임금인상

4분기 동안 정기적 주급(3개월 평균)의 연간 인상률은 0.1% 증가한 2%를 기록했다. 민간부문은 0.2% 증가해 2.2%를 기록한 반면, 공공부문은 0.2% 감소해 1.7%를 기록했다. 가장 임금인상이 높은 부문은 재정과 사업서비스 분야로 3.5%였고, 공공부문은 1.1%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 출처: 영국노동총(TUC) 홈페이지, 2012년 3월 1일자, 'Labour Market Report'

프랑스 : 93명의 르자비(Lejaby) 근로자들의 일자리 지키기

르자비 근로자 93명은 지난 2달간 프랑스에서 탈산업화(공장 폐쇄), 탈지역화(공장 이전)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일자리 지키기 투쟁을 국가적인 이슈로 만들었고, 결국 공장 재가동에 성공했다.

르자비 기업은 1930년에 브래지어를 만드는 업체로 시작하여 1960년 프랑스 속옷 업체 2위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생산라인의 대부분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공장을 폐쇄했다. 결국 르자비는 지난 12월 법정 파산상태에 이르렀고, 올해 1

월 18일 리옹(Lyon) 법원은 이 기업의 인수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르자비를 인수하고자 했던 기업은 프랑스 내 르자비 직원 450명 중 195명만을 고용승계하겠다고 밝혔고, 이생조 공장을 폐쇄조치하며, 생산기지를 튀니지로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는 4월과 5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현안은 고용문제이고 사르코지 대통령이 'Made in France'를 핵심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르자비 근로자들의 상

* 프랑스의 중부 도시 이생조(Yssingaux)에 위치한 르자비(Lejaby) 공장 근로자들의 고용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거리로 떠올랐다가, 지난 2월 2일 마침내 해결됐다.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대통령의 선심성 대책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프랑스 내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과 근로자들의 절박함이 동시에 드러난 사건이기에, 이 사건을 정리해 놓은 르푸앙(Le point)의 기사를 발췌하여 번역하였다.



황은 언론을 통해 크게 부각되었다. 지난 10년간 프랑스에서 사라진 일자리 수가 약 50만 개에 이르고, 르자비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이 50세 이상이라는 점도 관심을 끌었다.

결국 지난 1월 29일 사르코지 대통령은 TV 토론에서 르자비 근로자들을 방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대통령의 친구이자 루이비통(LVMH)의 최고경영자(CEO)인 베르나 아흐노(Bernard Arnault)가 나섰고, 루이비통의 가죽 제 공급업체 소파마(Sofama)가 이생조의 공장을 인수하기로 결정하면

서 이 사건이 마무리됐다.

지난 두 달간 국회에서, 그리고 거리 시위와 건물 점거 투쟁을 계속해 온 93명의 근로자들은 2월 7일부터 6개월에서 1년까지 재교육을 받게 되며, 그 이후에는 브래지어가 아닌 가방을 생산하는 일자리로 복귀하게 된다.

- 출처: Le Point, 2012년 2월 2일자, 'Lejaby: 93 ouvrières s' imposent comme une cause nationale et sauvent leurs emplois'

프랑스 : 공공부문 근로자의 6분의 1이 비정규직

“지역평의회(지방 공공기관)는 내 일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계약을 갱신해가면서 나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날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5년 전부터 프랑스의 한 지방평의회 소속으로 고등학교에서 서비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디자(Khadidja) 씨의 이야기이다.

프랑스에서 국가, 지자체, 그리고 병원에서 고용하고 있는 약 530만 명의 직원(2012년 1월 기준 프랑스 전체 인구는 약 6,500만 명) 중 89만 명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단기계약 비정규직이다. 이 비율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 14.6%를 거쳐 2009년에는 16.8%에 이르렀다.

1946년부터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신분은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장받아 왔다. 하지만 휴가자의 업무를 대체하거나 일시적으로 생기는 업무 공백에 대처하

기 위한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해 왔다. 또한 탁아시설 등과 같은 곳에서 생겨나는 계절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지니고 있었다. 즉, 이러한 비정규직은 공공행정기구가 원활히 작용하기 위한 유희유 같은 역할을 했다.

하지만 문제는 재계약의 남용이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태를 수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가장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에 국가기관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45%가 2007년도에도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그들 중 약 4분의 1가량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연구자, 기술자, 그리고 도서관 직원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8%가량은 근속연수가 10년 이상 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계약의 남용은 정식 공무원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과 사회보장비 차이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민간부문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다. 공공부문 계약직 근로자들은 계약 만료시 임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불안정노동 보상비를 받지 못한다. 더 큰 차이점은, 공공부문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만료 후 재계약(다시 비정규직)을 거부했을 경우, 실업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는 2010년 사르코지 대통령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을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보며 시정을 요구했

고, 2011년 3월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계약직 근로자들의 일자리 안정화’에 대한 협정서가 체결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행법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지난 8년 중 6년 이상 같은 기관에서 일했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이들의 수는 약 10만 명으로 추정된다.

- 출처: SEURET Franck, 《Les galériens de la fonction publique》, Alternatives économiques 310(2012년 2월호)

프랑스 : 공업 부문 고용 붕괴

탈산업화는 그리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프랑스 산업분야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33만 7천 개이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사라진 일자리가 66만 3천 개이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최근 3년 사이에 사라진 일자리이다. 한 연구기관에서 수집하여 발표한 자료(Trendo 투자 전망에서 수집, Les Echos 경제신문이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880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고, 그중 400개는 2009년에 폐쇄되었다. 같은 기간 494개의 신규 공장이 생겨 났기 때문에, 순수 증감은 386개의 공장이 사라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적 격차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경향은 일드프랑스(Ile-de-France) 지역(파리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은 지난 3년간 프랑스 산업 분야 고용 손실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볼 때, 전통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프랑스 북부 지역에서 고용 손실의 피해가 적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계화에 따른 고용 손실의 피해가 전통 산업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부가가치 활동이나 첨단 산업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예를 들면, 파리 주변부에는 자동차 산업이 대규모로 집중되어 있다. 또한 미디 프레네(남서부) 지역도 주목할 만하다. 이 지역은 에어버스와 그와 연관된 하이테크 기업들이 진출하여, 재산업화의 성공을 이룬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였다. 하지만 2008년 이후, 2000년도부터 생겨난 일자리가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이번 위기 속에서 프랑스 공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 출처: Alternatives économiques 311(2012년 3월호), ‘La débâcle de l’emploi industriel’



아시아

일본 :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개혁 초안

일본의 민주당 정부는 2011년 12월,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개혁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혁안은 사회보장의 기능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재정건전화의 동시달성을 지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혁안이 지향하는 일본의 사회상을 보면, 사회보장제도가 출산/육아를 포함한 생활이나 근로형태/방식에 중립적이고 선택 가능한 사회, 고용 등을 통하여 참여가 보장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생의 사회, 두터운 중간층이 지탱하는 큰 격차가 없는 사회, 어린이가 가족이나 사회와 관계를 맺고 양질의 환경에서 제대로 자라는 사회,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 선 포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에서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 수 있는 의료/개호체제가 실현되는 사회이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고령화가 더욱 진전되어도 전 국민이 의료보험과 연금을 유지하면서, 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득이 가는 사회보장을 실현함과 동시에, 세대 간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전 세대 대응형'으로 전환하여 취학 전, 취학 기간,

청년층에서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세대 차이 없이 누구나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사회 및 사회보장의 상호부조에 참가하여, 필요한 자에게 서비스와 급부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현역세대와 장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계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분야를 보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대책의 강화, 비정규직 고용안정/처우 개선 등을 꾀하여,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 5%의 소비세를 2014년 4월부터 8%, 2015년 10월부터 1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 출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2011년 12월 30일자, '社会保障·税一体改革素案'

일본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결과-여성임금 증가

일본 후생노동성은 2월 22일 ‘2011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지난해보다 여성 임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일반근로자(평균연령 41.5세, 근속연수 11.9년)의 임금은 296,800엔(한화 약 417만 원)인데, 남성(평균연령 42.3세, 근속연수 13.3년)은 328,300엔(한화 약 461만 원)이고, 여성(평균연령 39.9세, 근속연수 9.0년)은 231,900엔(한화 약 326만 원)이었다. 이는 남성은 전년과 같은데, 여성은 1.9% 증가한 수준이다. 여성의 임금 증가율은 1995년 이후 최고수준이었다. 이하 여성 임금의 증가를 연령층 등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여성 중 전년에 비해 임금 증가율이 높았던 연령층은 55~59세로 3.5%, 50~54세와 40~44세가 각각 2.6%, 35~39세가 2.3%로 중장년층의 임금증가율이 높았다. 학력별로 보면, 대졸/대학원졸이 3.2%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학/단기대학 1.0%, 그리고 고졸 0.2%로 고학력일수록 증가율이 높았다.

또한, 기업규모별로 보면, 1,000인 이상의 대기업이 3.2%, 100~999인의 중기업 1.6%, 10~99인의 소기업 0.6%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증가 폭이 컸다. 산

업별로 보면, 금융업/보험업이 6.4%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이어 건설업 4.0%, 기타 서비스업 2.7%, 교육/학습지원업 2.6%, 의료/복지가 1.5%였다. 반대로 감소한 산업도 있었는데, 소도매업 -2.0%, 생활관련서비스업/오락업 -1.4%가 대표적이었다. 제조업은 0.5% 증가에 그쳤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2.0%, 비정규직 0.8%로 정규직을 중심으로 여성의 임금이 전년보다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직위로 보면, 부장급 4.5%, 과장급 2.2%, 계장급 5.3%로 계장급과 부장급의 증가 폭이 높았다.

한편, 파트타임 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상승은 남성 1.0%, 여성 0.9%로 거의 비슷하였는데, 여성에 한정하여 임금상승을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층은 35~39세 2.3%, 기업규모는 소기업 1.9%, 대기업 1.6%였고, 중기업은 -1.0% 감소하였다. 산업별로는 기타 서비스업이 2.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조업 1.5%였다.

• 출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2012년 2월 12일자, ‘平成23 年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全国)の概況’

일본 : 연금의 지급개시연령 연장과 병행하여 65세까지 재고용 의무화

후생노동성은 기업이 희망자 전원을 65세까지 재고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고령자 고용제도를 2025년에 전면 도입할 방침을 확고히 하였다. 2013년부터 3년마다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노령연금(보수비례부

분)의 지급개시연령보다 연령이 높은 자에게는 기업이 재고용자를 선별하는 현행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인정한다. 후생노동성은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예외규정의 적용기준도



한 살씩 올리고, 경과조치를 두어 기업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16일 열린 노동정책심의회(후생노동성의 자문기관) 부회에 경과조치를 포함한 개정 고연령자고용안정법안의 요강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60세인 후생노령연금(보수비례부분)의 지급 개시연령은 2013년도부터 3년마다 한 살씩 높아져, 2025년도에는 65세가 된다. 새로운 제도는 연금급여가 지급될 때까지의 고용확보를 목적으로 노사협정에 근거하여 재고용자를 선별하는 현행 예외규정을 철폐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 기업에서는 “부담이 크다”며 반대하는 경향이 강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의 재고용희망자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적용해도 좋다고 인정하고 있다.

기업은 지급개시연령이 61세가 되는 2013~2015년도에는 전 희망자의 61세까지 고용을 확보하고, 그 이상의 연령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재고용자를 선별한다.

2013년부터 고연령자의 고용연장을 실시하게 된 기업은 총 12년에 걸쳐 고용연장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 출처: 일본경제신문 조간, 2012년 2월 16일자, ‘65歳まで雇用、25年度導入、厚労省、年金支給年齢上げと並行’

일본 : 노동정책심의회, 65세까지의 고용은 “타당하다”고 답신

노동정책심의회는 23일 기업이 60세 정년에 도달한 사원 중에서 재고용자를 선별하는 기준을 폐지하고, 희망자 전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한 고연령자고용안정법개정안에 대해서 고미야마 요우코 후생노동성 대신에 “타당하다”고 답신하였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업 측에 불만이 강하게 남아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전

면적인 도입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답신을 받은 후생노동성은 법안을 향후 국회에 제출하여 2013년 4월에 시행할 방침이다.

- 출처: 산케이신문 오사카 조간, 2012년 2월 24일자, ‘労働政策審、65歳までの雇用妥当’

중국 : 2011년 노사관계 특징

사회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현재 중국 노동관계에 많은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12년 중국사회 형세분석과 예측(중국사회청서) (2012年中国社会形势分析与预测)'는 '12차 5개년' 시기로 나아감에 있어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사회주의하에서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현 노동관계에 대해 사회청서가 제공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취업형세가 안정되고 임금이 인상되면서 2011년 노동분쟁 사건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9월까지 중국 각급 노동인사분쟁조정중재기구에 수리된 노동인사분쟁 사건은 93만 3천 건으로, 이 중 각급 중재기구에 수리된 분쟁건수는 42만 8천 건, 관련 근로자는 55만 3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에 처리된 사건은 40만 8천 건으로 결안율은 86.9%로 나타났다. 지난해 3/4분기 중국 각급 노동분쟁중재기구에 수리된 노동분쟁 사건 수인 44만 3천1백 건과 비교하면, 2011년 노동분쟁 사건 수는 동기대비 3.4% 감소했다.

노동분쟁의 내용으로 보면, 주로 임금, 경제보상금과 배상금, 보험복지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지난해 발생한 노동분쟁 사건은 관련 범위가 넓고,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 많아졌으며, 사건해결의 난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저장(浙江), 윈저우(温州) 등에서는 거시통제, 자금사슬단절 등으로 2011년 1~9월 동안 228건의 기업 도산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로 이

들 기업에서 근로자 14,644명의 총 7,593만 위안(한화 약 145억 원)의 임금이 체불되어 단일사건으로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수와 체불금액이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 외에도 사회청서는 중국 현 근로자의 안전생산환경에 대해 분석했다. 사회청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 말 기준, 안전사고 발생건수 감소추세의 기초 위에 중대한 생산사고와 사망자 수는 각각 동기대비 29.5%와 29.8% 감소했고, 특별 중대한 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는 동기대비 각각 77.8%와 74.4% 감소했으며, 다수 업종과 지역의 안전생산은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 중국 각종 생산사고의 발생건수는 여전히 매우 높고, 직업병 발생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도에 발생한 중대사고를 놓고 보았을 때, 생산, 건설, 교통 등의 업종은 여전히 안전책임, 예방조치, 안전감독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이 드러났다.

사회청서의 저자 중 한 명인 중국 노동관계학원 노동관계학과 치아오쩌옌(乔健) 학과장은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혁 이후부터 노동관계도 그에 따라 변화, 발전하였고, '12차 5개년' 시기로 나아감에 있어 중국 노동관계에 새로운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치아오쩌옌 교수는 "중장기 발전으로 보면, 민영경제가 중국 경제구조의 주체가 되었고, 노동관계 쌍방 주체가 진일보 명확하게 되었다. 계획경제체제하의 국가는 전 사회의 대표로서 이익일체화의 노동관계에서 기업과 근로자 양



자가 독립된 이익주체 간의 고용노동관계로 변화하였고, 노동관계의 운영 기제도 정부부문의 행정통제 위주에서 시장조정 위주로 변화하였다”고 말했다. 노동관계의 건립과 조정은 기본적으로 계약화로 실현되는데, 노동계약을 통해 시장화 노동관계를 건립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전국 규모 이상 기업의 노동계약 체결률은 97%, 소기업은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오찌옌은 노동시장의 노동력 수급관계는 노동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12차 5개년’ 시기 노동관계의 새로운 특징이라고 보았다. 그는 “2004~2011년까지 노동시장에는 ‘노동력 부족 현상(民工荒)’이 반복적으로 출현했고, 이는 노동력 수급관계가 갈수록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신세대 농민공이 높은 권리의식을 가짐에 따라 현재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되었고, 아울러 노동력 임금의 대폭 인상을 촉진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노동관계의 고용방식은 더 유연화되었고, 국유기업들의 노무과건, 가사도우미업의 비전일제 고용 및 가내수공업 기업의 품팔이 등 비정규 형태의 노동관계가 분명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2008년 이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취업난과 시장경쟁력이 가중되면서 노무과건이 무분별하게 양산되었고, 그 규모가 6,000만 명(주로 국유기업과 기관사업 단위에 집중되어 있음)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일부 중앙 국유기업에서는 심지어 3분의 2 이상의 종업원이 노무과건 근로자들이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행기 초기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서로 다른 소유제 기업의 노동관계가 주체구성, 근로기준, 협력기제 등의 측면에서 동일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동관계의 시장화와 동시에 중국 노동관계에는 비시장화 요인의 영향도 존재하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국유독점 기업의 노동관계이다. 일부 국유독점 기업은 그 행정독점적 지위, 재정보조와 세금감면 등을 통해 정규직 종업원의 임금과 비화폐소득은 사회평균수준보다 보편적으로 높아, 이로 인해 업종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었고, 기업이 대규모를 사용하고 있는 노무과건근로자와 서로 비교하면 동일노동 비동일임금의 현상도 존재한다고 치아오찌옌 교수는 말했다.

• 출처: 法制网, 2012년 1월 4일자, ‘劳务派遣或成为企业主流用工方式’

중국 : 2011년 생산가능인구 비중 10년 만에 감소

중국 노동연령인구의 비중이 10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말 60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7%에 해당하는 1억 8,499만 명이고, 65세 이상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9.1%에 해당하는 1억 2,288만 명으로 2010년 연말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2011년 15~64세 노동연령인구의 비중이 74.4%로 2002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몇 년 안에 노동연령인구의 비중이 소폭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노동공급 문제를 중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당교(中央黨校) 연구실 저우티엔용(周天勇) 주임은 노동연령인구의 감소는 사회양로부담을 증가시켜 국가경쟁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우 주임은 산아제한정책이 노동연령인구를 감소시킨 주된 원인이고, 산아제한정책을 향후 적당한 시기에 조정할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도시화 진행과정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의 관념이 변화하였고, 자녀양육비용이 높아지면서 출산의욕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1년 중국에서 '호적지와 거주지가 다른 인구(人戶分離的人口)'는 2억 7,100만 명으로 2010년보다 977만 명 증가했다. '호적지와 거주지가 다른 인구'라 함은 거주지와 호구등기지 소재지가 다르고 호구등기지를 6개월 이상 떠나 있는 자를 말한다. 또한 2011년 2억 7,100만 명의 '호적지와 거주지가 다른 인구' 가운데 '유동인구'는 2억 3천만 명으로 2010년보다 828만 명 증가했다. '유동인구'는 호적지와 거주지가 분리된 사람 가운데 대도시 내의 호적지와 거주지가 분리된 인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지난해 연말 기준, 중국 총인구는 13억 4,735만 명으로, 이 중 남성은 6억 9,068만 명, 여성은 6억 5,6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인구의 성비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2011년 중국 출생인구의 성비는 117.78(여성 100명에 대한 남성의 비율)로 지난해보다 0.16 낮아졌다. 국가통계국은 출생인구의 성비는 2008년 이래 연속 3년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 출처: 中国政府门户网站, 2012년 1월 19일자, '去年劳动年龄人口比重十年首降'



중국 : 기업근로자 퇴직금 10% 상승, 전국 매월 1인당 평균 양로금 1,531위안

올해 중국 기업근로자 퇴직금이 10%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社部)는 과거 7년 동안 기업근로자 퇴직금의 수준을 향상했더니 현재 전국적으로 매월 1인당 양로금은 이미 1,531위안(한화 약 291,300원)에 이르렀다고 했다. 북경 기업 기업근로자 퇴직금은 매월 평균 2,280위안(한화 약 433,800원)에서 2,510위안(한화 약 477,60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역사상 유례없이 대폭 상승한 사례로 기록된다.

◆ 기업근로자 퇴직금 10% 오르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과거 7년 동안 기업근로자 퇴직금의 급여를 올렸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매월 1인당 평균 양로금은 1,531위안에 이르렀다.

올해 중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업근로자 퇴직금의 급여를 올리려고 한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 수속을 마친 경우 1월 1일부터 매월 지급받는 기본양로금의 급여가 상향조정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이번 조정은 과거 물가 상승과 근로자 임금 수준 등의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고, 매월 1인당 평균 10% 상향 조정되며, 고급직에 해당되는 기업 퇴직기술자와 고령자 등은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급여를 인상할 예정이다.

각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와 재정부 등에서는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며, 신속히 기본양로금 증가 급여액을 기업퇴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2.8억 명에 이르는 도시근로자가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였고, 양로보험의 적립액은 1억 9,200만 위안(한화 약 365억 원)에 이르렀다. 작년 전국에서 기본양로보험을 체결한 사람이 타지로 전환된 경우도 78만 건에 이르렀다.

• 출처: 新华网, 2012년 1월 21일자, ‘企业人员养老金涨10% 目前全国月人均养老金1531元’